

G-Welfare Weekly Report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여소야대 정국, 현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에 변화 기대

01 주요 내용

1) 총평

- 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58.0%(2016. 4. 14. 7시 현재)로 최근 4차례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가운데 17대 총선(60.6%) 이후 가장 높음
 - 이틀간의 사전투표를 포함해 실질적인 투표일이 3일로 늘어난 것과 유권자의 선택지가 많아진 것 등이 정치에 관심이 없던 청년층을 투표장으로 유인하는데 주효했다는 분석



- 그러나 각 정당 간 쟁점이 되는 공약이 없는 등 정책선거가 되지 못했고, 특히 복지 관련 공약은 10대 공약을 중심으로 19대와 비교하면 그 비중이 현저하게 낮아짐

구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19대	53.8% (26개 중 14개)	34.0% (250개 중 85개)	-	46.9% (49개 중 23개)
20대	33.3% (30개 중 10개)	28.5% (151개 중 43개)	45.3% (106개 중 48개)	39.0% (136개 중 53개)

* 19대 통합민주당으로 비교

-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되면서 현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정부가 중단하거나 후퇴했던 정책에 대해 3개 야당이 공통으로 공약으로 제시
 - 누리과정 중앙정부 재정 책임 강화 : “보육예산 100% 중앙정부 담당” 등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육대란 해소
 -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폐지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의 중복급여를 허용하고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폐지하여 실질소득을 높여줌으로써 노인빈곤 완화에 기여
 - 건강보험부와 체계 개편 :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을 재산, 자동차 중심에서 소득중심으로 개편

** 새누리 : 122
더불어민주당 : 123
국민의당 : 38
정의당 : 6
기타 : 11

2) 복지 분야별 전망

- 노인 공약 : 일자리 확대, 노후 소득 보장 등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나 노인빈곤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참신하고 실현가능한(feasibility) 공약이 부족

새누리당	① 노인 일자리 확대 ② 시니어행복센터 확대 ③ 어르신 의료비 정액제 ④ 노인 치매관리 원스톱 서비스 ⑤ 공공실버주택 공급
더불어민주당	① 일자리 2배 확대, 수당 40만원으로 인상 ②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차등없이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③ 주택연금제 개선으로 은퇴 후 소득 확보
국민의당	① 일자리 2배/수당은 단계적으로 2배 확대 ② 기초생활수급자와 국민연금수급자 감액 기준 폐지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정의당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폐지 ② 기초연금에 대한 국고보조를 단계적 상향 ③ 공적연금의 소득대체를 상향 ④ 노인장기요양대상자 매년 1%씩 확대

- 장애인 공약 : 장애등급제 개편, 장애인 소득보장, 인권보호 등에 대한 공약이 집중

새누리당	① 취약계층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② 특수교사 증원/특수학급 연도별 400학급 이상 설치 ③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제품 정보은행 설립 ④ 장애인 콜택시의 타지역 이동 제한 해제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한 인프라 구축 ④ 권역재활병원 확대
더불어 민주당	① 장애인의무고용대상 사업장 확대 ② 주거급여의 보장수준과 수급대상 확대
국민의당	① 고용의무를 상향조정(민간 2.7%→3%, 정부 3%→5%) ②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인 취업 시 수급자격 1년 유지 ③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④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교수방법 구축 ⑤ 대중교통과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의 연계시스템 구축
정의당	①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②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탈시설·지역거주 종합정책 수립 ③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의무고용제 개편으로 새로운 고용모델 발굴

- 청청년 일자리 공약 : 청년고용할당제, 청년수당, 최저임금 1만원 도입 등이 특징적인 공약이나 노동시장 왜곡, 예산 확보 방안 미흡, 생산비용 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

새누리당	① 청년희망아카데미 전국 확대로 일자 연계, 교육, 창작 원스톱 서비스 연계 ② 전문계, 이공계 대학 재학시 벤처장학금 수여제를 통한 벤처기업 취업 연계 ③ 문화 기반 기업경제 활성화 등
더불어 민주당	① 공공중심의 일자리 70만개 창출, ② 청년전용 창업자금 1000억원 지원 등 청년 창업 환경 개선, ③ 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 할당률 5% 상향, ④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도입, ⑤ 청년 생활지원 등 청년 안전망 지원 제도 도입 등
국민의당	① 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4년간 활동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후납형 청년구직수당 제도 도입, ② 청년스타트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③ 학자금 대출 금리 하향, ④청년희망임대주택 공급 등
정의당	① 공기업/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연 24.5만개 일자리) ②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디딤돌급여(연 최대 540만원) ③ 표준이력서 사용, 채용기준·절차·결과 투명화

- 육 및 아동·청소년 공약 : 누리과정 재정 국가 책임,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보육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아동복지 공약은 미흡하여 현안인 아동학대 등에 대한 관심 확대 필요

새누리당	①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② 국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재정여건 고려) ③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진흥원 설립, 아동학대 관련 예산 확보(0.1%)
더불어 민주당	① 보육예산 100%를 중앙정부가 담당 ② 보육료 현실화 ③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국민의당	① 누리과정 국가책임 강화 ② 보육료 현실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③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정의당	① 누리과정 국고지원 확대 ②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③ 초과 보육 폐지

- 주거복지 : 새로운 정책보다는 현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의 공약이 대부분 - 가장 큰 이슈인 전월세 가격 급등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정책, 주거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공약도 제시 ※각 정당별 공약은 46호 참조

- 보건의료 공약 :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등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으나, 메르스 등 감염병 관련 공약은 더불어민주당만 제시

새누리당	①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최저보험료 도입 및 생계형 자동차 면제) ②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 ③ 어르신 의료비 정액제 2만원 단계적 인상
더불어 민주당	①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② 모든 병원 간병서비스 의무화 ③ 만성질환 약값 본인부담 절반 경감 ④ 일차 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개편 ⑤ 감염병 위기 대응 능력 향상 ⑥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⑦ 건강검진 혜택 농어민 제공
국민의당	①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② 실손의료보험비 인하(민간의료보험법 제정) ③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조기 확대 ④ 공공의료시설 및 서비스 확충
정의당	① 건강보험료 소득별 부과체계 전환 ② 의료 공공성 강화 ③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불평등 해소(보장률 80% 확대, 어린이입원비 100% 보장)

3) 재정 전망

- 복지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각 당의 재정 공약을 정리함***
 - 새누리당은 총선공약을 위한 지출 규모와 자원 조달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 더불어민주당은 총 147.9조원이 필요하며 재정지출절감, 국민연금 활용, 조세개혁을 통해 연평균 31.1조원을 마련하는 방안 제시. 국민연금기금용 국채 발행은 부채라는 점에서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
 - 국민의당은 총 46.3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세출예산 조정과 건강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이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낮음
 - 정의당은 총 191.5조원이 필요하며, 사회복지세 신설과 기존 조세의 증세로 49조원을 조달
- 지출규모

***홍순탁, “공약 논평 : 재정방안”,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 보도자료 (2016. 4.7)를 요약정리함

구 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지출 규모	147.9조원(5년)	46.3조원(5년)	191.5조원(5년)
연간 규모	29.6조원	9.3조원	38.3조원
주요 지출내역(연간 기준, 금액 상위 기준)			
1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12.6조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누리과정(2.5조원)	보건복지/취약계층 (16.1조원)
2	어르신 및 취약계층 지원 (7.0조원)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창출(1.7조원)	교육(5.9조원)
3	전월세난 해소 및 주거복지(5.1조원)	간병서비스 및 장기요양보험 확대(1.5조원)	노인(5조원)
4	저출산 극복(3.3조원)	농어업 지원(1조원)	청년/고용(3.4조원)
5	농어민 지원(0.6조원)	장애인(0.6조원)	주거(2.8조원)
6	기타 (1.1조원)	교육(0.6조원)	안전/자치(2.1조원)
7		안전한 수도물(0.4조원)	출산/육아(1.9조원)
8		기타(1.0조원)	농업/환경(1.1조원)
계	29.6조원	9.3조원	38.3조원

- 자원조달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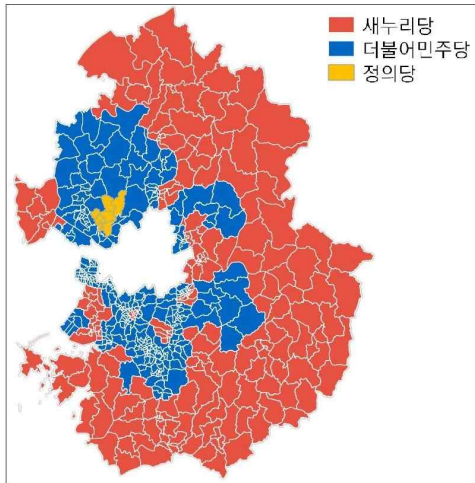
구 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조달 규모	155.4조원(5년)	46.3조원(5년)	245조원(5년)
연간 규모	31.1조원	9.3조원	49.0조원
기본 조달 방안	· 재정지출 절감(7.4조원) · 국민연금 활용(10조원) · 조세개혁(13.7조원)	· 세출예산 조정(8.6조원) · 건강보험재원(0.7조원) · 공론화와 합의를 통한 증세	· 사회복지세(20조원) · 조세개혁(29조원: 법인세, 소득세, 보유세, 상속증여세등)
조세를 통한 조달방안 및 규모			
사회 복지세	도입하지 않음	도입하지 않음	도입(20조원)
법인세	·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4.1조원) (500억원 22% →25%)	없음	· 법인세를 MB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8조원) · 사내유보금 과세(3조원)
소득세	· 초고소득자 조세부담 현실화(0.9조원) (구체적인 방안 없음)	없음	· 누진세 강화(3.4조원) · 주식양도소득 누진세(2조원) · 월세소득 종합과세 등 (3조원)
부동산 보유세		없음	· 실거래가 반영률 상향(4.5조원) · 최고세율 인상(4조원)
상속 증여세		없음	· 상속공제 축소(1.6조원) · 증여세 강화(미추산)
비과세 감면제도	·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5.7조원)	없음	
지하경제 축소	· 지하경제 축소(3조원)	없음	
기타			· 중소형 승용차 개별소비세 폐지 등(-0.5조원)
합계	13.7조원	-	49.0조원

02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경기도 개표결과와 향후 복지 전망

- 이번 총선에서 경기도는 지역구 국회의원 60명을 선출했으며, 소속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9) · 더불어민주당(40) · 정의당(1) 순임

[그림 1] 제20대 총선 경기도 지역구 당선결과



- 경기도는 전국에서 선거구가 가장 많고*
- 금일 마감된 개표 결과 도내 60개 선거구 당선자는 소속 정당별로 새누리당 19명, 더불어민주당 40명, 정의당 1명 순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하여 복지정책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
- 도내 격전지로 거론되던 수원 · 용인의 경우 수원은 더민주가 모두 당선되었고, 용인은 새누리-더민주의 무승부로 결론. 적중100% 지역*으로 꼽힌 포천 · 연천 · 안성 · 이천은 이번에도 새누리가 모두 당선됨

*19대 52석에서 20대 60석으로 총 8석 증가. 두 번째 많은 지역인 서울은 49석임.

*적중100*지역은 대선 · 총선 · 지선의 결과가 일치하는 지역

- 지역구 후보들의 공약 대부분이 소속정당 공약과 궤를 같이한 가운데 지역현안에 대한 공약도 일부 존재

<표 1>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주요공약 내용

주요 복지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 어르신 10% 우선취업 · 베이비부머세대 구직촉진금여 지원 · 경로당 주치의제 도입 · 경로당 냉난방비 국비지원 · 노인복지관 기능 확대한 시니어행복센터 건립 · 치매노인 보호체계 강화 · 장애인/어르신 전용목욕탕 설치 · 장애인등급제 폐지 ·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청년취업활동수당 월 60만원 · 0~15세 어린이 의료비 국가책임제 · 공공주택 공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월세 상한제 도입 · 관리비 적정화를 위한 착한 오피스텔법 추진 · 공공주택 관리비 투명성 확보 · 보육전문의료센터 설립 · 지역아동센터공부방작은도서관 지원 확대 · 아동보호자원통합시스템 구축 · 청년 및 신혼부부주택 매년 5만호 공급 ·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 누리사업 국가완전책임제 시행 · 누리과정 예산전용 금지 법제화 추진 · 서민 복지임금 100만원 지급

- 새로 구성된 제20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 나아가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복지 향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
 -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현안을 발굴하고 국가단위 현안으로 확대하는 역할 기대

2. 재단 주요사업 안내

사업명	주요내용
2016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간 : 5월 ~ 10월 (총 6회기) · 대 상 :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생활시설) · 내 용 :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맞춤형 전문컨설팅 제공 ※ 분야 : 조직진단, 인적자원관리, 지역사회자원, 예산회계관리, 특성화전략 등 · 문 의 : 경기복지재단 경영전략팀(☎267-9365)

03 FACT CHECK

국회의원, 지역의 일꾼 VS 나라의 일꾼?

-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의 발전공약을 걸고, 관련 플랜카드와 후보자들의 외침이 거리를 가득 매운 가운데, 국회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중앙에 파견한 지역대표라는 인식이 대다수
 - 지역 언론이나 후보자 스스로도 “지역의 대표로서 지역발전을 독심있게 추진해나갈 인재”가 국회의원의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
- 그러나 국회의원은 양극화, 일자리, 조세재정, 외교, 안보 등 국가적 사안을 해결하라는 소임을 부여받은 국민대표이며, 지역발전은 도지사, 시장·군수, 지방의원 등의 역할임
 - 선거구는 국회의원 후보가 국민대표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유권자들이 밀착 검증할 수 있도록 설정한 구획에 불과하며, 도지사, 시의원 등은 지역 내에 거주지를 가져야 하지만 국회의원은 주소지 제한 없이 어디서나 출마 가능한 이유이기도 함
- 그럼에도 국회의원의 5분의 4가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되고, 도로, 공항 등의 국책사업이 지역의 자산가치를 바꾸어왔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심리가 작용함
- 국회법 제24조에 명시된 “...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 하여야 함
 - 지역구의 이해에 집중하는 구유통(pork barrel) 정치에서 벗어나 지역 현안을 통해 국가적으로 당면한 과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국민 전체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책무임

04 통계로 보는 복지

20대 총선 여성 지역구 최다 당선, 장애인 후보는 1명에 불과



*단위: 명,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 2015년 1월 기준,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6.3%로 OECD 34개국 평균인 27.8%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비례대표의 50%를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한 17대부터 증가 추세
- 이번 20대 총선에 출마한 116명의 여성 중 48명이 당선되어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6%이며, 이는 19대의 49명(16.3%)에 비해 1명 감소한 수치이나 지역구 당선은 역대 최다임
-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는 18대에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5대부터 20대까지 한명에서 4명 사이로 나타남
 - 비례대표의 장애인 후보는 각 당별로 2명씩을 배정하고 있으나, 후순위인 경우가 대부분임
 - 결과적으로 20대 국회의 장애인 국회의원은 1명으로 확정되어 장애인 국회의원에 대한 각 정당들의 공천의지가 약했던 것으로 판단됨